

제 6 장

정부 및 행정 개혁

- ▶ 헤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
- ▶ 국민과 기업의 자유 지키는 정부 및 행정개혁

헤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

- 미국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신념을 실천하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과 현실과 통계에 근거한 뉴스를 제공하는 경제전문지 Wall Street Journal이 1994년부터 매년 11월 다음해의 경제자유도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전세계 각국 별로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다. 「자유로운 나라는 번영하며, 억압하는 정부는 가난을 만든다」는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현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1999년도 경제 자유도 지수평가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톱10은 홍콩, 싱가포르, 바레인,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대만, 그리고 영국이다. 경제자유도 평가 점수가 1점 이상 2점 미만의 나라들이다. 정부로부터 가장 심한 경제적 억압을 받고있는 10개의 나라의 순서는 북한(161위), 큐바, 리비아, 라오스, 이라크, 소말리아, 보스니아, 이란, 콩고, 베트남(152위) 순이다.
- 경제 자유도 분석은 경제적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적 번영의 수준도 높다는 현실관찰에 기초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10개 항목은 정부가 세법, 관세, 기업규제, 시장개입, 관료부패, 법 집행, 통관절차 등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정도를 현실적인 데이터에 의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정도를 계측 평가한다.
 - (1) 무역정책: 한나라가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외국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가
 - (2) 조세정책: 기업이윤, 개인소득, 부가가치, 판매에 대한 세금부과가 경제활동과 성장을 제약하는가
 - (3) 정부개입: 정부소비의 GDP비중으로 본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이 너무 크지 않은가
 - (4) 통화정책: 지난 10년간 평균 인플레이션으로 볼 때 정부의 방만함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았나
 - (5) 외국인 투자: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성장투자 소요자금이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공급되는가
 - (6) 은행자금: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은행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가
 - (7) 가격 및 임금결정: 시장경제 안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상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하는가
 - (8) 사유재산권 : 개인이 자산과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이 시장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고 이것이 법의 지배에 의해 보호되는가
 - (9) 정부규제: 상품수입, 시장판매, 신규사업창업이 정부허가나 규제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운가
 - (10) 암시장: 정부의 통제와 규제개입 때문에 위해 자유로워야 할 상품, 자산, 생산요소 거래가 암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 헤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지수는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증적 분석평가 도구이다.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정책 담당자에게 좋은 참고지표가 되고 있다.
 - 국민과 기업이 경제적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 자유가 제약받는 나라보다 나라가 더 번영한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나라는 역시 못사는 나라이며 예외 없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극심하다.
 - 1999년의 경제자유도 분석에 따르면 1998년에는 아시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러시아와 브라질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개입이 이루어진 나라가 27나라나 더 많아졌다. 선진국에는 오히려 29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더 신장되었다.

[경쟁력표 18]

1999년도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화지수 및 지난 4년간 변화추이

- 평가 나라수 : 161개국(1999년도)

- 평가 항목 : 무역, 조세, 정부개입, 통화정책, 외국개입, 은행, 임금/물가, 재산권, 규제, 암시장

국 가 명	1999년 순위	평 가 지 수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홍콩	1	1.25	1.25	1.25	1.25
싱가폴	2	1.30	1.30	1.30	1.30
바레인	3	1.70	1.70	1.60	1.60
뉴질랜드	4	1.75	1.75	1.75	1.75
스위스	5	1.85+	1.90	1.90	1.80
미국	6	1.90	1.90	1.90	1.90
아일랜드	7	1.95+	2.00	2.20	2.20
룩셈부르크	7	1.95	1.95	2.05	1.95
대만	7	1.95	1.95	1.95	1.95
영국	7	1.95	1.95	1.95	1.95
바하마	11	2.00	2.00	2.00	2.00
체코공화국	12	2.05+	2.20	2.05	2.00
일본	12	2.05	2.05	2.05	2.05
호주	14	2.10-	2.05	2.15	2.10
벨기에	14	2.10	2.10	2.10	2.10
캐나다	14	2.10	2.10	2.10	2.00
아랍에미리트	14	2.10	2.10	2.10	2.10
오스트리아	18	2.15	2.15	2.15	2.05
칠레	18	2.15	2.15	2.25	2.45
에스토니아	18	2.15	2.15	2.35	2.35
네덜란드	18	2.15+	2.20	2.00	1.85
덴마크	22	2.25	2.25	2.05	1.95
엘살바도르	22	2.25+	2.45	2.55	2.45
핀란드	22	2.25	2.25	2.30	2.30
독일	25	2.30	2.30	2.20	2.10
아이슬란드	25	2.30	2.30	2.50	-
노르웨이	27	2.35	2.35	2.45	2.45
한국	28	2.40-	2.30	2.45	2.30

자료 : 미국 헤리티지재단, 「1999년도 경제자유지수」, 1999. 12. 1

[경쟁력표 18] (계속)

국 가 명	1999년 순위	평 가 지 수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쿠웨이트	28	2.40	2.40	2.40	2.40
말레이시아	28	2.40	2.40	2.60	2.40
파나마	28	2.40	2.40	2.50	2.40
태국	28	2.40	2.40	2.30	2.30
스웨덴	33	2.45	2.45	2.45	2.55
아르헨티나	34	2.50+	2.60	2.65	2.65
프랑스	34	2.50	2.50	2.50	2.50
이탈리아	34	2.50	2.50	2.60	2.70
스페인	34	2.50	2.50	2.60	2.70
포르투갈	38	2.55+	2.60	2.60	2.60
스리랑카	38	2.55-	2.45	2.45	2.65
트리니다드 토바고	38	2.55	2.55	2.55	2.55
바바도스	41	2.60	2.60	2.80	3.00
페루	41	2.60+	2.80	2.90	3.00
볼리비아	43	2.65	2.65	2.85	2.75
마우리티우스	43	2.65	-	-	-
키프러스	45	2.70-	2.60	2.60	2.60
자마이카	45	2.70-	2.60	2.60	2.70
우루과이	45	2.70	2.70	2.70	2.80
보츠와나	48	2.75	2.75	2.85	2.80
과테말라	48	2.75+	2.80	2.80	2.85
요르단	48	2.75	2.75	2.70	2.80
나미비아	48	2.75	2.75	2.95	-
오만	48	2.75-	2.65	2.75	2.85
필리핀	48	2.75-	2.65	2.80	2.90
벨리즈	54	2.80	2.80	2.70	2.70
코스타리카	54	2.80	2.80	2.80	2.80
이스라엘	54	2.80	2.80	2.80	2.90
스와질랜드	54	2.80-	2.70	2.80	2.90
터어키	54	2.80	2.80	2.80	3.00
⋮					
중국	124	3.80	3.75	3.80	3.80
쿠바/북한	160	5.00	5.00	5.00	5.00

자료 : 미국 해리티지재단, 「1999년도 경제자유지수」, 1999. 12. 1

[경쟁력표 19]

정부개혁관련 IMD 평가 Government(정부행정)부문 경쟁력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정부행정 부문 종합순위	37위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국가부채 분야	15위	홍콩	중국	싱가폴	노르웨이	대만
3.01 중앙정부의 국내부채 ('97)(억\$)	(순위없음) 333	홍콩 0.00	중국 291	싱가폴 714	노르웨이 290	대만 422
3.02 중앙정부의 국내부채 ('97)(%, GDP비중)	8위 7.5	홍콩 0.0	인도네시아 0.0	태국 0.7	중국 3.2	콜롬비아 3.2
3.03 중앙정부의 해외부채 ('97)(억\$)	(순위없음) 16.0	홍콩 0.0	중국 0.8	싱가폴 0.0	노르웨이 9.7	대만 0.0
3.04 중앙정부의 해외부채 ('97)(%, GDP비중)	14위 3.618	홍콩 0.000	스위스 0.000	싱가폴 0.001	룩셈블그 0.010	러시아 0.013
3.05 중앙정부의 재정 흑자/적자 ('97)(억\$)	(순위없음) -6.04	홍콩 -	중국 -7.03	싱가폴 9.17	노르웨이 8.08	대만 -6.84
3.06 중앙정부의 재정 흑자/적자 ('97)(%, GDP비중)	29위 -1.37	싱가폴 9.64	노르웨이 7.40	홍콩 5.80	뉴질랜드 4.01	말레이시아 2.99
3.07 공공재정의 관리가 지난5년간 개선된 정도*	40위 3.69	아일랜드 8.72	아이슬랜드 8.56	캐나다 8.51	스페인 8.37	싱가폴 8.28
3.08 총외환보유고(금 및 공식 리저브 포함) ('98)(억SDR) (금은 온스당 35SDR로 평가)	9위 369.3	일본 1,588.8	중국 1,081.4	홍콩 629.5	대만 628.1	미국 593.8
정부지출 분야	14위	싱가폴	칠레	브라질	멕시코	일본
3.09 정부 고용 ('96)(%, 총고용대비)	5위 4.5	칠레 2.5	러시아 2.9	싱가폴 3.6	태국 4.1	한국 4.5
3.10 일반정부지출 ('97)(%, GDP비중)	6위 18.8	중국 12.3	싱가폴 16.8	인도네시아 17.0	아르헨티나 18.5	태국 18.7
3.11 군사비지출이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저해가 되지 않는 정도*	45위 3.09	아이슬랜드 9.57	아일랜드 9.22	룩셈블그 9.22	홍콩 9.00	핀란드 8.87
재정정책 분야	18위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3.12 총조세수입의 총합(직접세와 간접세, 사회보장세 포함) ('97)(%, GDP비중)	16위 23.25	중국 11.01	콜롬비아 13.63	인도네시아 14.69	아르헨티나 15.28	인도 15.89
3.13 유효 개인소득세율 ('98)(%, GDP대비, 국민1인당)	7위 3.00	중국/홍콩/인도/남아공화국 0.00				태국 1.01
3.14 개인소득세의 총합 (이윤, 소득, 자본이득) ('97)(%, GDP비중)	(순위없음) 4.17	홍콩 2.27	말레이시아 2.41	태국 2.31	인도네시아 1.48	중국 0.28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표 19] (계속)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3.15 종업원의 사회보장 기여 비율(의무부담비율) ('98)(%, 1인당GDP 대비)	15위 3.00	중국/홍콩/아이슬란드/인도/말레이시아/폴란드/남아공화국 0.00				
3.16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분 납부액 ('97)(%, GDP비중, 비자발 기여분)	(순위없음) 0.75	홍콩 -	말레이시아 0.15	태국 0.11	인도네시아 0.46	중국 0.00
3.17 실질개인세 부담(환급후)이 개인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정도*	24위 4.58	홍콩 9.12	싱가폴 8.28	말레이시아 7.45	베네주엘라 6.91	인도 6.77
3.18 기업이윤에 대한 평균 법인세율 ('98)(%, 세전이윤대비)	39위 38.00	홍콩 16.50	헝가리 19.40	브라질/슬로베니아/대만 25.00		
3.19 법인세 납부(이율, 소득, 자본이득에 대한) ('97)(%, GDP대비)	(순위없음) 2.70	홍콩 4.17	말레이시아 6.13	태국 3.30	인도네시아 6.90	중국 0.67
3.20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율 (의무부담 기여율) ('98)(%, 1인당 GDP대비)	15위 7.50	중국/홍콩/인도/말레이시아 0.0				남아공화국 0.30
3.21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율 (의무부담 기여율) ('97)(%, GDP대비)	(순위없음) 1.36	홍콩 -	말레이시아 0.15	태국 0.16	인도네시아 0.00	중국 0.00
3.22 실질 법인세가 혁신기업가적 활동을 고취시키는 정도*	32위 4.73	홍콩 8.95	아일랜드 7.91	싱가폴 7.76	핀란드 7.68	칠레 7.60
3.23 자본 및 자산세 납부액 ('97)(%, GDP대비)	41위 3.15	콜롬비아 0.00	베네주엘라 0.02	슬로베니아 0.03	필리핀 0.04	홍콩 0.12
3.24 간접세 수입 납입액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과세) ('97)(%, GDP대비)	20위 10.16	홍콩 3.47	일본 4.37	싱가폴 4.74	미국 4.78	인도네시아 5.01
3.25 조세회피가 당신의 나라에서 드문 정도*	29위 3.06	싱가폴 8.18	홍콩 7.68	뉴질랜드 7.18	핀란드 7.02	칠레 7.00
정부행정 효율성 분야	43위	싱가폴	핀란드	룩셈불그	아일랜드	네덜란드
3.26 정부 경제정책이 경제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정도*	41위 3.93	싱가폴 8.82	룩셈불그 7.29	핀란드 7.26	스페인 7.23	말레이시아 7.18
3.27 법과 제도의 틀이 당신 나라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정도*	45위 3.05	싱가폴 8.64	홍콩 8.56	핀란드 8.53	캐나다 8.49	뉴질랜드 8.20
3.28 의회의 입법활동이 경제의 경쟁력 요건에 부합하는 정도*	40위 3.87	싱가폴 8.48	핀란드 7.45	아일랜드 7.07	룩셈불그 7.00	아이슬란드 6.69
3.29 내각 또는 국무위원들간에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은 정도*	44위 3.34	싱가폴 8.91	핀란드 7.94	아일랜드 7.88	스페인 7.83	룩셈불그 7.52
3.30 정부의 투명성이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해주는 정도*	42위 3.45	싱가폴 8.45	룩셈불그 7.52	핀란드 7.42	스페인 7.03	아일랜드 6.99
3.31 정부의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	40위 2.97	싱가폴 9.00	핀란드 7.55	룩셈불그 7.43	스페인 6.80	스위스 6.59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표 19] (계속)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3.32 정치체제가 현재 당면한 경제적 도전에 잘 적응하는 정도*	42위 2.26	싱가폴 8.24	핀란드 7.52	아일랜드 7.13	스페인 7.09	네덜란드 6.91
3.33 공공서비스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정도*	35위 2.46	뉴질랜드 6.67	핀란드 6.45	캐나다 5.86	싱가폴 5.75	호주 5.64
3.34 관료주의가 사업개발과 추진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40위 1.80	싱가폴 7.45	핀란드 7.03	홍콩 6.28	덴마크 5.87	스위스, 5.54
3.35 관세행정이 상품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39위 2.759	싱가폴 8.424	덴마크 8.416	홍콩 8.070	핀란드 8.032	스웨덴 7.791
3.36 뇌물공여와 부패비리가 공직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정도*	36위 2.20	덴마크 9.34	핀란드 9.26	뉴질랜드 9.00	아이슬랜드 8.69	싱가폴 8.48
정부 시장개입 분야	46위	싱가폴	홍콩	칠레	스위스	뉴질랜드
3.37 제품과 용역에 대한 책임이 사업을 너무 제한하지 않는 정도*	47위 4.68	싱가폴 8.12	핀란드 8.06	홍콩 8.00	스위스 7.69	칠레 7.62
3.38 정부의 가격통제가 대부분 산업의 제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	47위 3.91	뉴질랜드 9.23	아르헨티나 9.07	칠레/핀란드 9.00		홍콩 8.89
3.39 정부보조금(민간기업과 공기업) ('97)(%, GDP비중)	10위 0.40	스위스 0.00	스페인 0.13	베네주엘라 0.14	콜롬비아 0.17	필리핀 0.20
3.40 환경보호를 위한 현행법률이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44위 5.32	싱가폴 8.18	홍콩 8.00	핀란드 7.58	헝가리 7.51	말레이시아 7.21
3.41 노동관련 규제(고용 또는 해고실행, 최저임금제 등)가 충분히 유연한 정도*	34위 3.83	싱가폴 8.00	홍콩 7.89	헝가리 7.43	스위스 7.40	뉴질랜드 7.23
3.42 실업관련 입법이 현재 일자리를 고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	29위 4.57	싱가폴 8.24	칠레 7.47	말레이시아 7.26	홍콩 7.25	브라질 6.42
3.43 경쟁법이 당신 나라의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는 정도*	27위 5.44	독일 7.53	핀란드 7.42	덴마크 7.27	뉴질랜드 6.96	캐나다 6.91
법 정의 및 안전 분야	38위	싱가폴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3.44 정의를 사회에서 공정하게 지켜지는 정도*	31위 4.202	뉴질랜드 8.885	캐나다 8.629	덴마크 8.608	핀란드 8.581	스웨덴 8.552
3.45 개인적 안전과 사유재산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정도*	33위 5.63	오스트리아 9.23	싱가폴 9.22	홍콩 8.75	캐나다 8.69	덴마크 8.61
3.46 사회응집력에 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	43위 4.48	싱가폴 9.25	룩셈부르크 8.44	말레이시아 8.33	덴마크 8.18	오스트리아 8.16
3.47 정치불안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정도*	39위 4.18	룩셈부르크 9.66	스위스 9.63	오스트리아 9.54	핀란드 9.52	호주 9.30
3.48 범죄의 심각성 ('96)(명, 주민 10만명당 살인, 폭행, 강도로 피해입은 사람 수)	(순위없음) 60.8	싱가폴 30.5	오스트리아 60.1	스위스 93.2	덴마크 210.9	핀란드 83.2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 경쟁력 제안 ●

국민과 기업의 자유 지키는 정부 및 행정개혁

첫째, 정부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예산 회계제도를 기업형 회계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의 정부가 국제경쟁을 하고 있다.
- 감사원과 재무관련 공무원조차 회계지식과 경영분석능력이 부족하여 정부경영의 효율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정부경영 의사결정에 재정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 재정운영의 틀을 실시간 경영화하는 기업형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
- 정부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정부도 기업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자. '정부경영회계제도 정보화 추진협의회'(가칭)를 기획예산처에 구성하고 미국의 OMB나 뉴질랜드의 OPM처럼 정부재정을 기업화하자.

둘째,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이 편한 정부행정서비스 연계추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관료가 편한 행정체계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행정처리로는 일등국가가 될 수 없다.
- 정부도 민간 서비스기업으로부터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 정부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에도 식스시그마와 같은 품질관리를 하면 된다.
- 행정서비스의 구조에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모든 정부행정서비스에 연계추적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셋째, 국가재난방지를 위해 실시간(Real Time)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국가재난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임기 응변식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재난경보시스템은 있으나 통합관리 연계가 없고 사전감지시스템은 정보교류가 늦어 常時化되어 있지 못하다.
- 재난감지체계는 실시간으로 운영되어야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 물량 및 인력확보 중심의 대응체계를 과학적인 시스템적 운영체계로 바꾸자.

넷째,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실시간(Real-Time) 통계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경영판단에 신속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경제활동의 기록인 데이터는 정보량에 따라 통계로 만들어지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현재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통계제도의 경직성으로는 민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
-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정책판단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 전자정보망에 의한 실시간(Real-Time)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자.
- 농업·어업·축산업자에게 생산관련 통계를 제공해 가격폭락의 위험을 줄이고 구인구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장참여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자. 정부 및 관련기관의 통합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다섯째, 창의성과 자율성제고를 위해 국가출연연구소의 기업 경영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 나라 과학기술분야 투자성과는 민간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여정도가 미흡하다.

- 국책연구소는 돈 쓰는 연구기관, 민간기업연구소는 돈버는 연구기관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자.
- 연구환경과 관리시스템을 바꾸면 국책연구소의 연구생산성과 국제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다.
- '국가출연연구소 기업경영화기획단'(가칭)을 설치하고 연합연구회 이사회가 나서서 법령을 정비하자. 연구환경의 정보화와 프로젝트 추진에 공개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하자. 연구성과가 고객과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자.

여섯째, 정보화 선진국 달성을 위해 인터넷을 확산하고 통신료를 저렴하게 낮출 것을 제안한다.

- GDP대비 통신투자는 우리 나라가 GDP대비 1.279%로 세계 7위이나 평균 컴퓨터 사용대수는 세계 10위이고 전자상거래의 비즈니스 활용은 세계 40위이다.
-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인터넷이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통신비용이 높고 연계체계가 불편하다 지식기반 정보국가 건설을 위해 인터넷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행정 통신여건도 정보기반시설구축에 적응하여야 한다.
- 인터넷 요금구조를 개선하여 1인 1PC가 가능한 인터넷 장치보급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지식정보대국 건설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지식정보자원의 댐을 구축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IMF 관리체제 이후를 대비한 정보화 뉴딜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실업자 급증에 따른 사회불안을 일자리 창출과 능력에 따른 보상의 새로운 희망으로 국가를 재창조해야 한다.
- 산업화시대의 뉴딜 정책은 루즈벨트대통령이 이끌었지만 정보화시대의 뉴딜 정책은 한국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이끌어야 한다.
- 컴퓨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잘 쓰는 민족을 만들어 대학, 공공도서관, 박물관의 유형·무형 자산을 디지털 전자도서관화로 네트워크화된 개방형 전자문화정보센터로 구축하자.
-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지식정보자원관리공단'을 설립하자.

여덟째, 대통령 국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정전자청와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21세기 정보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 국정운영의 즉시성, 투명성, 정확성은 미래의 리스크를 줄이고 대내외적인 신뢰를 구축한다.
- 대통령의 국가경영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정 전자청와대를 구축하자.
- 대통령중심제인 우리 나라 정부행정체계를 정보표준화와 행정정보공개로 열린 청와대를 만들자.

아홉째, 지식정보독점 관치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에서만 입법(3권 분립)할 것을 제안한다.

-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여 관치 경제의 뿌리가 깊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하는 3권 분립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하여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했다.
- 행정부가 국가정보를 독점하게 되니 전문화된 관료가 입법을 주도하여 행정부가 자꾸만 비대해지고 있다.
-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 중심제로 개혁하여 국회가 국민대표 입법권을 주도하게 하자.
- 법은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만들고 법안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회기 말 무더기처리를 방지하자. 자유투표 교차투표의 관행을 수립하여 의원의 자율 입법권을 강화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자.